

민주 “윤 당장 체포... 영장 집행 방해는 내란공범” 압박

박찬대 “내란수괴 옹호...헌법 무시” “대통령실·경호처, 순순히 협조해야” 관저 앞 탄핵 찬반집회 전문 감돌아 최 권한대행에 마은혁 임명 등 촉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당장 체포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또한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처 등을 향해서도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란공범”이라고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내란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지만 내란 수괴 윤석열은 여전히 관저에서 지내며 반성하기는커녕 내전을 선동하고 있다”며 “일부 국무위원들과 대통령실, 경호처 등은 여전히 내란 수괴 옹호에 여념이 없고, 국민의힘은 대놓고 탄핵을 반대하며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것도 모자라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며 내란이 아니라 강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내란을 진압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 본부는 체포 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한 내란수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자백이다. 경호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 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각 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즉시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등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하여야 할 특검 추천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고발 사유 및 직무유기로 탄핵사유가 된다”며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해야 할 조치를 빠르게 이행하는 것이 국민과 국가와 역사에 죄를 짓지 않는 길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해 온 대통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을 반대하며 드러누워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령이 전날(1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체포 반대 집회를 이어간 지지자 등에게 편지를 쓴 것은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협하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내란의 수괴 윤석열이 관저에 숨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법률집행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면서 함께 싸우자고 소리친다”며 “오는 6일까지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만반의 대책을 세우

고 영장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도 모든 국가 기관에 영장 집행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분별없이 체포를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공무 집행 방해 내란의 공범으로 단호하게 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도 내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모르고, 극단의 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관련 상황과 극우 세력들에 대한 윤석열의 메시지 전달이 심각한 수준이어서 의원들도 국회에서 비상 대기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도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날 이 곳에선 ‘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와 ‘대통령 수호 집회’가 동시에 신고돼 수백명이 몰렸다. 서울=김선욱 기자

‘전남 ‘에너지 수도’ 도약... 행·재정적 뒷받침 절실’

1면서 계속 전남도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해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전남 RE100·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하는 한편 올해 초 ‘전남도 RE100·분산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개최, 전남도의 RE100 비전을 공식 선언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및 정치권의 협조, 적극적인 정책 및 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한전뿐만 아니라 각종 에너지 관련 공기업 정책이 시장논리가 아닌 정치권에 따라 변경되면서 정책 일관성·연속성이 결여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박노연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연구위원은 “RE100 실현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대규모 설비 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 초기시장 창출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기술 실현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공공구매 등 초기시장 진입 지원, 혁신기술의 표준화·인증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 또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소비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량 대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 및 막대한 비용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며 △발전사와 수요기업 간 전력 직거래(PPA) 확대 △국내배출권거래제에 녹색프리미엄제도 포함 △정부·지자체, 민간에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부지 확보 지원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에 대한 인센티브(세액공제 등) 부여 등을 요청했다.

헌재 ‘8인 체제’ 가동... 오늘 2차 변론준비 기일

“신임 재판관 2명 바로 사건 투입”尹 체포 권한쟁의 등 심리 속도

헌법재판소가 ‘8인 체제’를 가동하고, 본격적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나선다. 헌재는 3일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과 쟁점을 추가 정리하고 심리 일정 등을 조율한다.

전헌재 헌재 공보관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임 헌법재판관 2명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 공보관은 ‘8인 체제 첫 재판관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재판관 회의나 평의 정례회 계획’ 등을 질문에는 “아직 재판관 회의와 관련해 전달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조한창(왼쪽),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2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배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적법요건 검토를 포함해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통상의 적법요건이라고 하면 청구인 적격 등 모든 적법성을 다 고려하는 판단”이라며 “그 검토부터 선행돼 이뤄질 예

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주심 재판관 재배당 및 수명재판관 추가 지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사건 배당에 관한 사안 및 수명재판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전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나아가 헌법재판관 1명에 대한 임명이 불발된 데 대해서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에 더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관련 된 위헌 확인 사건 중 한 건은 동일한 청구인이 제기한 계엄 포고령 위헌 확인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다”며 “지난해 12월31일 전원 재판부에 회부됐다. 사안을 고려해 신속하게 심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김선욱 기자

나주시 공고 제2025-1호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열람 공고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1041-3번지 일원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 3.
나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생산녹지지역	22,082	감)22,082	-	-	
자연녹지지역	-	증)22,082	22,082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정	변경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1043 일원	생산 녹지지역	자연 녹지지역	22,082	100% 이하	▶ 영산강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위한 용도지역 변경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도서: 열람장소에 비치
3. 열람장소: 나주시 도시과, 축산과, 금천면 행정복지센터 사무실
4.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1. 3.(금) ~ 2025. 1. 20.(월)
5. 의견제출 방법: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제출
○ 열람장소 직접 또는 전자우편(yjw9821@korea.kr) 제출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도시과 도시계획팀(☎061-339-89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타임 DRONE TIME

고퀄리티(4K) / 저렴한 가격
드론 촬영·편집

스포츠행사/축제/산업현장
호텔/펜션/학교
부동산광고·분양/지적도
선박특수촬영/생산시설/양식장
아파트/교회
웨딩/이벤트/(웨)드라마 등

드론타임
010-5681-8084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받아드립니다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개발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원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못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주세요!! ★
010-5679-0990, 062)714-2846

부동산매매

- ◆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산 29-17 6968㎡(2108평)
- ◆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산 892-4 550㎡(166평)
- ◆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전 920-1 3973㎡(1202평) = 11491㎡(3476평) 9억원
- ◆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전 919-1 2386㎡(722평)
- ◆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전 919-13 44㎡(13평)
- ◆ 무안군 무안읍 교촌리 창 919-14 1072㎡(324평) = 3502㎡(1059평) 3억원

전체합계 14,993㎡(4535평)
계획관리지역, 도로에서 진출입가능
010-9119-4981